



Read the full book on: [10.1787/9789264193307-en](https://doi.org/10.1787/9789264193307-en)

## 지식자본, 성장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지원

### 국어 개요

혁신은 사업성공의 핵심적 사항이지만, 혁신이 발생하는 분야는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혁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R&D)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기업들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특허, 디자인, 신규 조직프로세스, 기업 고유스킬 등과 같은 광범위한 무형자산에 투자한다. 이러한 무형자산들이 통합되어 지식기반자본(KBC)를 이루게 된다.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수년 동안 지식기반자본(KBC)에 대한 사업투자가 기계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의 회원국들의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사업투자는 유형자산에 투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넘어서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기간 동안에도 전반적인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지식기반자본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증거의 제시와 이와 관련되어 혁신, 과세, 기업활성, 경쟁, 기업보고, 지적재산권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책 당면과제를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사업투자는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평균 20% - 34%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기반자본은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최고급 차량이 수 백만 라인의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신규차량개발의 비용에서 점차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 또한, 지식기반자본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들이 혁신기업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의 비율로 비교하는 경우, 미국과 스웨덴의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비해 거의 2 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기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유사한 기업에 비교하여 4 배의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 다국적 기업(MNE)의 국제조세설계에서 팩터 분석에 있어서 R&D 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공제는 정부에서 R&D 세금유인책으로 입안한 예상액수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원국은 R&D 에 대한 세금공제로 세금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국내 지식산업 생산과 연관된 과급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세금유인책으로 R&D 의 부양에 의존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것은 혁신상승으로 이끌지 못하는 낭비되는 세금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 더욱이, 다국적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일반적으로 신생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R&D 에 지원되는 세금유인책을 활용하는 다국적기업에 비교하여 경쟁열위의 위치로 내몰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지식기반자본과 관련되어 다국적기업 세금설계를 통해 수입에서 저과세나 무과세로 전환되는 국가들에서의 그 금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 지식기반자본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경쟁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의 경쟁은 여타의 부문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 지적재산권(IPR)은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프레임워크 조건으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법규는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저작권체계는 지면과 인쇄의 시대에 고안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출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회원국 전체에 있어서 기업의 시장가치와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 사이에正的 상호관계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재무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재무를 저해하고 기업가버너스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 혁신과 성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더 낫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더욱 정확한 측정과 공통된 측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사업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적자본정책의 올바른 수립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인적자본은 지식기반자본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전문성을 코드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 또한 지식기반자본의 부상은 고용과 소득불균형에 대해 심오한 함의가 있게 된다. 지식자본기반의 경제는 스킬과 비정형 수작업과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지만, 근로자에 비해 투자자대부분 지식기반자본의 궁극적인 오너)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 주요 정책적 권장사항:

-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주요 프레임워크 조건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비용 절감의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 적절하게 입안된 프레임워크 조건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고부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 대출체계, 초기단계의 투자자금의 조달은 지식기반자본 투자를 부양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실패에 대해 과도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파산법도 역시 중요하다. 파산관련 법규의 엄격성을 최고의 수준에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특히 관련 기업으로 자본흐름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입안자들은 혁신을 R&D에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를 넘어서는 확장된 혁신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 데이터, 조직자본(organisational capital)과 같은 여타 형태의 지식기반자본도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 정책은 실패비용을 낮추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및 상업화하기 용이하게 만들고, 기업들이 잠재적 성장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과는 달리 국제조세설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독립적인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R&D 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지식기반자본의 사용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세금공제가 되는 사례를 감소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회사의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통해 추가적인 방안을 개발하여 GDP의 국제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 경쟁정책의 개선방향: 플랫폼 제공업체 사이의 적절한 경쟁확보, 불필요한 제품시장의 경쟁제한 규제의 제거, 혁신을 보호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쟁법규의 집행.
- 빅데이터 세트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OECD 회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접근 개방,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ICT 스킬과 관련된 부문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
- 지식자산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경제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체계는 경쟁활성화 정책과 효율적인 법률체계와 결합되어야만 한다. 특허품질의 잠식문제(특허가 진정으로 새로운 혁신을 반영하는 특허인지의 여부)를 해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제간의 지적재산권체계에 있어서 상호인정과 비교가능성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3), *Supporting Investment in Knowledge Capital, Growt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193307-en